



## 미국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논란과 시사점

김세중 선임연구원

- 미국경제의 경우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는 회피한 것으로 보이나,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정치권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부채한도 상향조정 실패 시 심각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의 국가부채는 2013년 3월 초 한도(16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시점까지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됨.
  -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 측이 정부 재정지출 삭감 프로그램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와 연계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한도 문제의 조속한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 1월 15일 말란 블라인더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미국 재정지출 가운데 세금의 비중이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실패 시 재정지출이 26%까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GDP의 6%에 해당한다고 경고함.
  -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지 못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자 감축방안 마련을 촉구함.
- 1917년 이전 미 의회는 정부의 채권발행에 모두 관여했으나 1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의 한도만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함.
  - 현재 전세계적으로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결정하는 나라는 덴마크와 미국이 유일하며 덴마크의 경우에는 국가부채 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한도에 이르렀을 경우 한도 조정문제를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도 장기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양당의 대립으로 부채한도 상향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은 1940년 이후 90여 차례에 걸쳐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왔으며, 오바마 대통령 1기

시절에도 6차례의 상향 조정이 있었음.

■ 미 정치권은 2011년에도 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이견으로 국가부채가 한도를 넘어서는 시점까지 한도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2011년 8월 2일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직후 S&P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혼란을 야기함.

- 2011년 정치권은 미국의 장기부채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복지지출 축소를 통한 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증세를 통한 세수확충으로 적자를 감축하지는 오바마 정부의 대립으로 부채한도 상향조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음.
- 결국 국가부채가 한도를 초과하고 재무부의 비상조치도 효력을 다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사태 발생하기 며칠 전인 2011년 8월 2일 양당은 복지지출 축소와 세수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함.
- 그러나 신용평가기관 S&P는 양당의 합의안이 재정지출 감축에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2011년 8월 5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70년 만에 최초로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하향조정함.

■ 부채한도 상향조정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한도 조정실패로 미국이 국가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버냉키 연준의장은 부채한도 조정이 추가적인 재정적자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부채한도 상향조정 실패 시 미국 경제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
- 공화당 측에서도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화당이 미국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재정절벽 협상 문제와 부채 한도 상향조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국가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는 상충될 수 밖에 없음.
-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Guardian 등)